

野 “윤 대통령, 이상민 해임 거부하면 다음주 탄핵”

민주당,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국민의힘 “합의정신 파기...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할 이유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에도 이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 수용을 거부한다면 다음 주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안전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이날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뒤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보고되도록 하고, 이튿날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한다는 애초의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의견에 기존의 방침을 수정할 가능성도 비쳤으나, 기자간담회에 앞서 열린 회의에서 향후 대응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을 먼저 발의한 배경을 두고 “(참사에) 책임을 지는 첫 번째 방법은 자진해 물러나는 것인데, 그 요구에 응답하지 않아 두 번째 방법인 반강제적 방식으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으 기회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거부하거나 이 장관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으면 마지막 방법인 탄핵소추로 가는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가결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기국회 회기는 내달 9일까지다.

여당에서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되는데 해임을 건의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비판 나오는 데 대해서는 “경찰·소방 등을 총괄하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장관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경찰과 소방 공무원 등이 제대로 (국정조사에서) 증언할 수 있겠나”라며 “일선에 대한 책임 있는 수사와 국정조사도 이 장관의 파면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 필요하다면 (이 장관을) 기관 증인이 아니라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면 된다”고도 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보고에 필요하다고 하는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을 안건이 없다면 해당 본회의는 열리지 않는 게 맞다는 지적도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 이를 보고해야 하는 안건이 생기므로 본회의를 여는 게 맞다”며 “해임건의안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므로 다음 달 2일 본회의도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해임안 발의와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



더불어민주당 위성근 의원(오른쪽)과 이수진 의원이 지난 30일 국회 의원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해임건의안 처리 단계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면서 “이미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돼 있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물겠다고 했는데 국정조사가 시작되기

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자, 사실상 ‘국정조사 보이콧’ 입장을 내비쳤다.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따지기도 전부터 이상민 장관 해임을 밀어붙이는 것은 ‘합의 정신’을 파기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시각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노란봉투법’ 국회서 본격 논의

파업 노동자에 기업 손해 청구 제한...야당 의원들 단독 표결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30일 법안심사소 위원회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재계와 노동계 이해가 첨예하게 엮여 갈리는 탓에 환노위 소관 법안 중 최대 쟁점법안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이날 소위 법안 상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단독 표결로 이뤄졌다.

소위는 김영진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4명, 국

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일단 소위에 상정되기는 했으나 여야 간 견해차가 커서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28일 노동계 인사들과 만나 “가능한 방법을 의논해 이른 시일 내 가 시작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바 있다.

정의당은 이날부터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농성에 들어간다.

이정미 대표는 농성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도록 기업과 협상할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환노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노조의 폭력, 불법쟁의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은행 대출금리 인하 촉구

진보당, 전북도의회서 기자회견

진보당이 4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와 오은미 전북도의원 등 진보당 당원들은 지난 3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에서 열고 “거대 은행이 손쉬운 예대마진(예금·대출 금리 차이)으로 배를 불린다는 비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4대 시중은행은 대출금리를 인하여 민생 경제의 어려움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전체 은행의 올해 1~9월 이자 이익은 40조6천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조9천억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윤 대표는 “금리 인상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얻게 되는 초과 이익에 대해 특별과세를 하는 황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며 “그 세수를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한다면 금융 공공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아동성범죄 ‘신분 위장 수사’ 절차 간소화 추진

이형석, 법률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은 국회의원인 지난 30일 ‘1번방’ 사건 등 교묘하고 악랄해지는 디지털 아동성범죄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분위장수사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9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위장하는 수사를 허용하는 ‘아청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디지털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을 위한 ‘위장수사’를 도입했다.

위장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로 나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아청법’상 위장수사 제도를 활용해 올해 7월까지 총 사건 172건, 19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 중 신



분비공개수사로 147건, 94명을 검거했고 신분위장수사로 23건, 105명을 검거해 신분위장수사를 통한 검거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만 있으면 수사가 가능한 반면, 신분위장수사는 검찰을 경유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수사가 가능한 승인절차 문제로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형석 의원은 “교묘하고 악랄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검거율이 높은 신분위장수사 승인절차를 현재 경찰이 검찰을 경유해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식에서 경찰이 직접 법원에 허가를 받는 절차로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사망으로 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임산부 배려 캠페인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

임산부 먼저

임산부는 임신기간 호르몬의 변화로 입덧과 구토, 과도한 피로감, 우울감 등 몸과 마음이 힘들 수 있으며, 특히 걸로 구분이 잘 안되는 임신 초기에는 무리한 활동이나 스트레스가 유산의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산부배려, 우리 모두 함께해요

- 임산부 배려석은 비워두거나 양보하기
- 줄서기를 하고 있다면 임산부에게 순서 양보하기
- 모두에게 해로운 담배, 임산부에게는 특히 더 조심하기
- 직장에서 임산부에게 무리한 근무와 스트레스는 금물
- 출산 전·후 휴가와 단축근무 신청은 당연한 권리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